

# 축구장이 혐오시설?

수완지구 아파트 단지 주민들 체육공원 싸고 '분쟁'

광주시 수완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축구장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평화도시'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써 주민 건강 증진과 화합 도모의 공간으로 조성될 체육시설 때문에 데여 주민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12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토공) 등에 따르면 광산구 수완·장덕동 등 '수완지구 입주예정자 대책 협의회'(이하 수완대책협의회)와 '우미아파트 2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우미아파트비대위) 아파트 주민들 간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지구 내 중흥·코오롱·현진아파트 등 12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수완대책협의회는 축구장 건립을 반기고 있지만 우미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광주 수완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구 내에 조성될 축구장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광주시 광산구 우미아파트 2차 앞에 조성될 축구장이 입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채 황량한 벽판으로 남아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 수대협·토공 '주민 건강·화합 공간' 공사 중단 인근 우미 2차 주민들 "소음·주차 불편" 반발 중흥아파트 "그러면 우리쪽에 ..." 옥신각신

갈등의 원인은 지구 내 체육공원(면적 1만2천11㎡)에 조성될 축구장·체육공원 세로 90m·가로 45m의 축구장(4천605㎡)을 포함해 배드민턴장(169m²)과 체력단련장(60m²)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완대책협의회와 토공은 지난해 12월 초 이 같은 시설 건립 내용을 글자로 한 체육공원 조성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체육공원과 인접한 우미

아파트 2차 입주민들이 소음·주차장 문제 등을 이유로 축구장 건립에 반대하면서 지난 1월 초 공사가 중단됐다. 체육공원 내 축구장과 우미아파트 간 직선거리는 40여m, 이 아파트 주민들은 축구장 대신 어린이 놀이터와 주차장 등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분쟁이 계속되자 수완대책협의회는 우미아파트비대위와 두 차례

만남을 갖고 축구장 주변에 소음방지를 위한 완충녹지(높이 3m·폭 10m의 흙벽)를 설치해 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중흥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4일 '자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축구장 조성이 백지화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아파트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요구하고 나서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미아파트비대위 관계자는 "체육공원 조성 자체가 아니라 공원 내에 지어질 축구장을 반대하는 것이다. 다른 장소로 옮겨가도 개의치 않는다"며 "주말마다 축구장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텐데,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비난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수완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체육공원은 8만여 수완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의 것이지 한 아파트 주민들의 것이 아니다. 축구장이 혐오시설로 아닌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경찰의 꽃 형사과 "아! 옛날이여..."

'경찰의 꽃'으로 꼽히던 '형사과'가 기피 부서로 전락하고 있다. 반면 내근직인 '수사과'와 경찰 지구대의 선호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12일 광주광경찰에 따르면 이날 정기인사에서 형사과 직원 55명 중 15명이 타부서 발령을 신청했다. 이중 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원은 근속 승진자 2명을 포함한 7명이다. 이에 따라 형사과엔 7명의 결원이 발생했지만 지원자는 단 한 명

도 없었다.

반면 수사과엔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빈자리는 2곳이었으나 형사과 직원을 포함한 18명의 직원이 수사과를 지원했다.

서부경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형사과 직원 67명 중 11명이 타부서 근무를 원했으나 4명만 받아들여지는 등 기피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업무 많고 처우 열악 '기피과' 수사과 등 내근 선호 높아져

보과·보안과 등으로 알려졌으나, 빈자리만 있다면 지구대 등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부서로 옮기고 싶어한다는 게 일선 형사들의 설명이다.

형사생활 20년차인 한 경찰은 "우리가 젊었을 때 '형사가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며 "처우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기피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형호기자 khh@

충남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영광지역 어민들과 사고 보상을 담당한 손해사정법인 간의 보상 절차를 둘러싼 입장차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맞서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맞서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맞서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들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맞서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들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맞서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들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맞서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들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맞서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들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맞서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들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맞서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들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맞서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들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맞서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들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맞서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들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맞서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들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맞서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들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맞서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로드림은 또 김씨 등을 상대로 '5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들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범인족을 무고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로드림은 지난해 김씨 등 어민 8명이 손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민들까지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

&lt;p